

2021 국가직 7급 해설

<출제비중>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환류	지자
1	5	5	4	4	3	3

<총평>

전반적으로 무난한 난이도였으나, 조금 생소한 내용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20문제에서 25문제로 변경되면서 좀 더 다양한 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에서 대부분입니다만, 조금 생소하게 느끼셨을 만한 문제는 19번(통계적 가설검정의 오류), 22번(오즈의 분권화 정리)입니다.

19번(통계적 가설검정의 오류)는 $1-\alpha$ 가 신뢰수준이고, $1-\beta$ 가 검정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면 풀기 쉬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소거법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22번(오즈의 분권화 정리)는 어떤 (지방)공공재의 중앙공급으로 인한 비용절감 및 지역 간 외부성이 없다면 사회적 후생은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로 파레토 효율적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할 경우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걸쳐 획일적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할 때보다도 (지방정부가 공급할 때) 최소한 같거나 더 높다는 이론입니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다양한 이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01. 다음의 단점 혹은 한계로 인하여 정확이 어려운 예산제도는?

- 사업구조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
- 결정구조가 집권화되는 문제가 있다.
- 행정부처의 직원들이 복잡한 분석 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 ① 품목별 예산제도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 ③ 계획예산제도
- ④ 영기준 예산제도

답: ③번

<풀이의 핵심>

※ 계획예산제도 핵심어: 기획과 예산편성의 유기적 연결, 맥나마라에 의해 미국 국방부에 도입, 계획지향, 하향식, 집권적, 경제학적 지식활용 (→ 의회의 이해 어려움)

<해설>

사업구조라는 표현이 나오면 계획예산제도입니다. 결정구조가 집권화되고, 공무원과 의회가 복잡한 분석 기법과 편성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은 계획예산제도의 단점입니다.

02.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활용된다.
- ②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 ③ 법률상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 ④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답: ②번

<풀이의 핵심>

※ 준예산: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정부는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될 때까지 특정 경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헌법」
제54조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해설>

- ① (O) 헌법 제5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② (X)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④ (O)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을 위해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03.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이다.
 ④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답: ①번

<풀이의 핵심>

※ 주민참여예산제도

의의	예산편성(예산심의과정 아님) 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과정적 측면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중시) →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협력적 통치
최초 도입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1989년 세계 최초로 실시 (시민이 시예산 중 6% 예산편성 → 시의회는 시민이 제출한 예산 편성한 수정 없이 가결)
우리 나라	①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도입 → 2006년 「지방재정법」에 근거마련(임

도입	의적 규정) → 2011년에 의무화(「지방재정법」 제39조)
	② 중앙정부에서도 2018년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음 → 2018년에 2019년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행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39조)
	④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해설>

- ① (X) 지방재정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	

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에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③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④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나 그 대표, 또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이 간담회, 공청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참여하는 제도(직접참여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 ② 거래비용은 탐색비용, 거래의 이행 및 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 ③ 시장의 자발적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크면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④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조직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답: ①번

<풀이의 핵심>

※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시장보다 조직(계층제)가 효율적인 이유

- ① 내부조직(계층제)은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완화시킴
- ② 소수교환관계에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줄여줌
- ③ 구성원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수렴됨으로써 불확실성 감소
- ④ 거래의 내부화로 정보의 편재(정보밀집성) 문제, 자산의 전속성(특정성) 등이 쉽게 극복됨
- ⑤ 거래의 내부화로 내부비용(의사결정비용)이나 거래비용이 절감됨(※ 조직 내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집행과정에서 순응을 구하는 비용인 외부비용은 늘어남)

<해설>

- ① (X) 계층제가 소수교환관계에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 ② (O) 거래비용은 조직들이 함께 일을 할 때 그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통제비용, 거래 관계의 유지 비용, 정보 비용 및 대체 비용 등과 같은 경제적 교환과 연관된 모든 비용을 포함).
- ③ (O) 시장에서 거래하는 비용이 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④ (O) 조직경제학인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조직구조의 효율성이 거래조직의 출현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효율성의 관건이라고 주장합니다.

0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제적 손실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②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③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은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④ 개혁 시기 조정은 강제적 전략이다.

답: ③번

<풀이의 핵심>

※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은 각 방법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시킬 때를 생각해봅시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설득할 수도 있고(규범적 방법), 회초리를 들고 강제로 시킬 수 있으며(강제적 방법), 성적이 오르면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공리적 방법).

<해설>

- ① (X) 경제적 손실 보상, 불이익 방지 등은 이익 침해 방지 또는 보상하는 공리적·기술적 방법입니다.
- ② (X)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자발적 협력과 개혁의 수용을 유도하려는 규범적·사회적 방법입니다.
- ③ (O)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촉진은 규범적·사회적 방법입니다.
- ④ (X) 개혁실시의 시기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저항을 피하고자하는 것은 공리적·기술적 방법입니다.

0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ㄴ. 서로 관련된 사무들을 배분할 때는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ㄷ.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ㄹ. 시·군 및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ㅁ. 주민의 편익증진과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① ㄱ, ㄷ, ㅁ
- ② ㄴ, ㄷ, ㄹ
- ③ ㄱ,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답: ④번

<풀이의 핵심>

※ 사무배분 원칙

현지성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주민참여가 용이한 사무,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
보충성의 원칙	-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 된다는 원칙 - 소극적 의미 → 최소한의 보장 성격 → 하급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상급 공동체의 관여 금지 - 적극적 의미 →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의미 → 상급정부는 기초 정부 또는 하급 공동체가 활동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함
종합성의 원칙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집중적으로 배분하여야 함
포괄성의 원칙	사무 배분에 있어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함께 배분해주어야 한다는 원칙
불경합의 원칙	- 권한·책임 명확화의 원칙 - 국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사무의 소속과 그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계획과 집행의 분리 원칙	계획은 중앙정부,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 → 이 원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보는 입장으로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수평적 관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약화되고 있음
이해관계 귀속의 원칙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국한되는 경우는 그 지역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경비 부담의 원칙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함
능률성(경제성)의 원칙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위하여 사무를 각 단체의 규모, 행·재정능력, 인

	구수 등을 고려하여 <u>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에 배분하여야 함</u>
--	---

※ 우리나라 기능배분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u>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u>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u>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u>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u>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u> → <u>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종합성·포괄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u>
--

<해설>

- ㄱ. 현지성의 원칙
 - ㄴ. 포괄성의 원칙
 - ㄷ. 보충성의 원칙
 - ㄹ. 적극적 의미의 보충성의 원칙
 - ㅁ. 중복배분금지 원칙
- 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 사무배분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07.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제재력이 약화되는 역기능이 있다.
- ②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③ 호혜주의는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 ④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답: ④번

<풀이의 핵심>

※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상호신뢰, 호혜주의, 친사회적 사회규범(비공식적·사회적 통제력), 자발적 네트워크, 적극적 참여

<해설>

- ① (X)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규범 또는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제공합니다.
- ②, ③ (X) 신뢰, 호혜주의 등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입니다.
- ④ (O) 사회적 자본은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협상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킵니다.

08. 일반적인 조직구조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계선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참모는 정보제공, 자료분석, 기획 등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ㄴ. 부문화의 원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조직단위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ㄷ.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고도의 수직적 분화가 일어나 고층구조가 형성되고, 좁을수록 평면구조가 이뤄진다. ㄹ.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답: ②번

<해설>

- ㄱ. (O) 계선은 정책결정·집행하고, 국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기관이고 참모는 계선기관을 지원·조정·촉진하는 기관입니다. 계선은 정책을 집행하므로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참모는 계선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보제공, 자료분석, 기획 등의 전문지식을 제공합니다.
- ㄴ. (O) 부문화(부성화)의 원리는 서로 연관된 업무들을 묶어 조직단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 ㄷ. (X)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구조(적은 계층 수)를 갖고, 좁은 조직은 중간관리자가 많이 필요하여 고층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 ㄹ. (O)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들이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게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09. 호프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한 경우 공식적 규정을 많이 만들어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려 한다.
- ②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 ③ 권력거리가 큰 경우 제도나 조직 내에 내재되어 있는 상당한 권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 ④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여성성이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한다.

답: ②번

<풀이의 핵심>

※ 호프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

권력 거리	① 권력거리: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와 차별을 수용하는 정도(지배에 대한 복종의 정도) ② 권력거리가 약한 문화는 분권화나 권한
-------	---

	의 위임이 잘 되어 있는 반면, 권력거리가 강한 문화는 집권화와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함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①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우선시하고 독립심이 강함 ② 집단주의: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중시, 사람들과의 화합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중시
남성성 vs 여성성	①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야심차고 자기과시욕이 강하며 섬세함이 부족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함 ② 여성성이 강한 문화는 돈이나 물건의 소유와 같은 외적이고 양적인 성공보다는 불행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 등 인간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평등을 선호
불확실성의 회피	불확실성 회피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은 불안이나 반대 또는 대립을 기피하고 안정과 합의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 → 불확실성 회피가 약한 경우 이견이나 다양성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강한 경우 공식적인 규범을 많이 만들어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안정 지향)하려 함
장기성향 vs 단기성향	① 장기성향이 강한 사회는 과거의 전통을 중시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긴 안목을 가진 경우 ② 단기성향이 강한 사회는 전통보다는 현재 직면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응적이며 변화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편
관용 vs 억제	욕망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관용적 문화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사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억제 문화에서는 욕망이나 욕구를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권장하고 쾌락 추구의 충동성이나 중독성과 같은 부작용을 경계

⇒ Hofstede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거리가 강하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 집단주의 성향, 여성적 문화의 특성(다른 사람 보호, 인간관계 중시, 약한 자에게 공감) 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됨

<해설>

- ① (O) 불확실성 회피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은

불안이나 반대 또는 대립을 기피하고 안정과 합의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 회피의 정도가 강한 경우 공식적인 규범을 많이 만들어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안정 지향)하려 합니다.

- ② (X) 집단주의는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중시하며, 집단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으려 하고, 사람들과의 화합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③ (O) 권력거리란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와 차별을 수용하는 정도입니다. 권력거리가 강한 문화에서는 집권화와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합니다.
- ④ (O)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야심차고 자기과시 욕이 강하며 섬세함이 부족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10.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와 부하의 관계, 부하의 성숙도, 과업구조의 조합에 따라 리더의 상황적 유리성(situational favorableness)을 설명한다.
- ②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경우 과업 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③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를 사용하여 리더를 과업 지향적 리더와 관계 지향적 리더로 분류했다.
- ④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답: ①번

<풀이의 핵심>

※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모형(상황적합 이론)의 세 가지 변수: i) 리더와 추종자와의 관계(유리, 불리), ii) 업무구조(명확, 불명확), iii) 직위에 부여된 권력(강, 약)

<해설>

- ① (X) 부하의 성숙도는 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O) 연구결과 상황이 유리 또는 불리할 때는 임무중심형 리더(과업 지향형 리더십)가, 중간 정도의 상황에는 직원 중심형 리더가 적합합니다.
- ③ (O) 피들러는 리더들의 리더십행태를 실제로 알아내기 위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LPC: Least -Preferred Co-worker)’를 평가하게 하는 조사표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동료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LPC 평점이 높은 사람이며, 인간관계중심적인 리더십행태를 보이는 사람인 반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를 불리하게 평가한 사람은 LPC 평점이 낮은 사람이며 임무중심적인 리더십행태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 ④ (O) 피들러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 연구의 상황론적 접근방법입니다.

11.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 민주화에 기여
- ②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 강화
- ③ 정당정치 발달에 공헌
- ④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답: ④번

<풀이의 핵심>

※ 엽관주의: 정치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인사권을 가짐 → 정치적 성격 강함 → 민주성↑, 정치적 중립↓, 안정성↓(선거결과에 따라 공직 교체가 이루어짐), 전문성↓(전문성보다 정치적 충성도로 임용), 정당정치 발달(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당원이 필요)

<해설>

- ①, ②, ③ (O)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이 강화(정치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인사권을 가짐)되며,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합니다.

④ (X) 엽관주의는 주기적 대량 경질로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합니다.

12.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이다.
- ②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인사제도이다.
- ③ 공무원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집단화할 염려가 있다.
- ④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답: ④번

<풀이의 핵심>

※ 직업공무원제의 특성

- (1) 전 생애 동안 근무 →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보다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잠재력)이 더 중요시됨
- (2) 일반능력자 주의: 공무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공직에 근무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므로 전문가보다는 폭넓은 시각과 안목을 가진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유리
- (3) 공무원을 조직의 최하위 계급으로 채용해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면서 단계적으로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도록 운영됨 → 폐쇄형 임용 체계, 계급제
- (4) 직업공무원은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게 되므로 공직에 대한 직업적 연대 의식을 가지게 되어 공무원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과 단결심을 갖게 됨
- (5)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공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해설>

- ① (O)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O)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알고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상급직에 진출하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동안의 전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입니다.

③ (O) 직업공무원제는 관료주의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④ (X)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 단결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3.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중 직접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회적 규제
- ② 보조금
- ③ 조세지출
- ④ 공기업

답: ④번

<풀이의 핵심>

※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

- ① 직접적 수단 → 정부 직접 개입: 정부소비, 경제적 규제, 직접대출, 정보제공, 공기업
- ② 간접적 수단 → 시장에 맡기고 정부개입 최소화: 사회적 규제, 계약, 보조금, 대출보증, 공적보험, 조세지출, 사용료, 과징금, 불법행위책임법, 바우처

<해설>

① 사회적 규제, ② 보조금, ③ 조세지출은 간접적 수단이고, ④ 공기업은 직접적 수단입니다.

14.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정책평가 대상 확정
- ㄴ. 평가 결과 제시
- ㄷ. 인과모형 설정
- ㄹ. 자료 수집 및 분석
- ㅁ. 정책목표 확인

① ㄱ → ㅁ → ㄷ → ㄹ → ㄴ

② ㅁ → ㄱ → ㄷ → ㄴ → ㄹ

③ ㄱ → ㄴ → ㄷ → ㄹ → ㄺ

④ ㄱ → ㄷ → ㄴ → ㄹ → ㄺ

답: ③번

<해설>

일반적인 정책평가는 먼저 ㄱ.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확인(원래 의도한 목표를 명확히 함)하고, 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하며(정책평가 대상 및 기준의 확정), ㄷ. 정책수단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인과모형을 설정한 후, ㄹ.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ㄺ.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정책결정의 품질 제고 및 정책 내용의 개선에 활용합니다.

답: ③

15.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을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수용해 공직사회의 침체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 ② 일반적으로 폐쇄형 인사제도는 직위분류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반행정가보다 전문가 중심의 인력구조를 선호한다.
- ③ 개방형 인사제도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비해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근무를 장려한다.
-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내부승진과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다.

답: ①번

<풀이의 핵심>

※ 개방형과 폐쇄형의 비교

구분	개방형	폐쇄형
신규 임용	전 등급에서 허용	최하위직에만 허용
임용 자격	전문능력 중심	일반능력 중심 → 일반행정가
신분 보장	신분 불안정	근속 근무 장려 → 신분보장
관련 제도	신규채용자: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을 지 니고 있어야 함 → 직무 중심의 직위분 류제와 관련	내부승진, 신분보장 → 계급제·직업 공무원제와 관련

<해설>

- ① (O)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직의 개방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공직의 침체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 도모할 수 있습니다.
- ② (X) 직위분류제와 관련이 있고 전문능력 중심인 것은 개방형입니다.
- ③ (X) 장기근무를 장려하는 인사제도는 폐쇄형입니다.
- ④ (X) 폐쇄형 인사제도는 공무원의 경력 발전과 근속 근무가 장려되는 체계로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내부승진과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습니다.

16.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 개인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내면적 다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② 다양성 관리란 내적·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조직구성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과정이다.
- ③ 균형인사정책, 일과 삶 균형정책은 다양성 관리의 방안으로 볼 수 없다.
- ④ 대표관료제를 통한 조직 내 다양성 증대는 실적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답: ③번

<풀이의 핵심>

※ 다양성 관리는 융통성을 높이는 인사행정의 흐름(적극적 인사행정 및 관리 융통성 체제)에서 이해합시다.

<해설>

- ①, ② (O) 오늘날 개인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내면적 다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다양성 관리란 내적·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조직구성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과정입니다.
- ③ (X) 행동규범의 규칙성 완화, 근무시간제화와 휴가 프로그램의 유연성 증대 등은 다양성 관리의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인사정책, 일과 삶 균형 정책은 다양성 관리의 방안입니다.
- ④ (O) 대표관료제는 능력·자격을 2차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여 실적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의 응집성이 아주 강한 혼란상태에 있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술하고 설명한다.
- ②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은 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그들이 투입하는 에너지가 유동적임을 의미한다.
- ③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끼워넣기(by oversight)와 미뤄두기(by flight)가 포함된다.
- ④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답: ③번

<풀이의 핵심>

※ 쓰레기통 모형

- 1) 의의: 조직화된 무정부(organized anarchy) 상태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 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조직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2) 전제조건

- (1) 불분명한 선호(문제성 있는 선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호에 문제가 있음 → i)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들 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합의가 없음, ii) 참여자 한 개인을 놓고 볼 때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름
- (2) 불명확한 기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 (3) 수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 시간적 제약으로 참여자가 유동적임

3) 의사결정의 방식

- (1) 진빠기 작전(choice by flight): 스스로 다른 선택 기회를 찾아 떠날(flight) 때까지 기다림 → 관련된 문제의 주장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다가 힘이 빠져 다른 기회를 찾을 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
- (2)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기 전에 재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

<해설>

- ① (X)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 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입니다.
- ② (X) 시간적 제약으로 참여자가 유동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수시적 참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③ (O)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옳은 지문입니다.
- ④ (X) 목표와 수단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불명확한 기술입니다. 의사결정에서 달성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여기에서는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18.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립되는 입장에 내재된 가정과 논증을 표면화시키고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 ③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한다.
- ④ 참가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전문성' 자체보다는 이해관계와 식견이라는 기준에 바탕을 둔다.

답: ③번

<풀이의 핵심>

※ 정책델파이의 특징

- (1) 선택적 익명성: 초기단계에만 익명으로 응답 → 정책대안들에 대한 주장이 표면화된 이후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함
- (2) 식견있는 다수의 창도(advocacy: 주장하고 이끄): 참가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전문성' 자체보다 이해관계와 식견이라는 기준에 바탕을 둬 → 일반적인 델파이에 비해 참여의 범위가 이해 당사자까지 포함하여 넓어짐
- (3) 양극화된 통계처리: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수치가 사용됨
- (4) 구성된 갈등: 참여자 간의 갈등이 정책이슈에 내재된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가정에 입각하여 대안의 결과를 창조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어서 의견상의 차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 정책델파이의 결과는 특정한 제한이 없음(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갈등이 계속될 수도 있음)

<해설>

- ① (O) 정책델파이는 의견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으나 보다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② (O) 정책 델파이는 양극화된 통계처리를 합니다. 즉,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수치가 사용됩니다.
- ③ (X) 정책 델파이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주장이 표면화된 이후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합니다.
- ④ (O) 참가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전문성' 자체보다 이해관계와 식견이라는 기준에 바탕을 둡니다.

19. 통계적 가설검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종 오류는 실제로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은 것인데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② 제2종 오류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지 않은데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③ 제1종 오류는 α 로 표시하고, 제2종 오류는 β 로 표시한다.
- ④ 확률 $1 - \alpha$ 는 검정력을 나타내며, 확률 $1 - \beta$ 는 신뢰수준을 나타낸다.

답: ④번

<풀이의 핵심>

※ 1종 오류와 2종 오류

제1종 오류(α 에러)	제2종 오류(β 에러)
ex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닌 A씨가 범인으로 몰려 처벌을 받는 오류 =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닌 A씨가 범인이라는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ex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 A씨가 처벌을 받지 않는 오류 =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 A씨가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귀무가설 채택하는 오류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해설>

- ① (O) 영가설은 귀무가설을 의미합니다.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가 제1종 오류입니다.
- ② (O) 옳은 대립가설(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지 않음)을 기각(대립가설 기각 =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음)하는 오류가 제2종 오류입니다.
- ③ (O) 제1종 오류는 α 로 표시하고, 제2종 오류는 β 로 표시합니다.
- ④ (X) 확률 $1 - \alpha$ 는 신뢰수준을 나타내며, 확률 $1 - \beta$ 는 검정력을 나타냅니다. 신뢰수준이란 귀무가설의 채택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수준 95%는 해당 여론조사를 100번 하면 오차범위 내 동일한 결과가 나올 횟수가 95번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정력은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대립가설이 사실인 경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하며 대립가설이 사실인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옳은 결정의 확률인 검정력은 $1 - \beta$ 가 됩니다.

20.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기부여의 과정이론(process theory) 중 하나이다.
- ② 기대감(expectancy)은 개인의 노력(effort)이 공정한 보상(reward)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의미한다.
- ③ 수단성(instrumentality)은 개인의 성과(performance)와 보상(reward)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 ④ 유인가(valence)는 개인이 특정 보상(reward)에 대해 갖는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답: ②번

<풀이의 핵심>

※ 브룸의 기대이론: 동기의 강도는 i) 자신의 노력이 성과(1차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기대, ii) 성과가 보상(2차적 결과)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iii) 예상되는 보상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에 달려있다고 주장

<해설>

- ① (O) 브룸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입니다.
- ② (X) 기대감이란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공정한 보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③ (O) 수단성은 1차 수준의 결과(성과)가 2차 수준의 결과(보상)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강도입니다.
- ④ (O) 유인가는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2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 ②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여성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 ③ 1984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④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사업을 제외한다.

답: ①번

<풀이의 핵심>

※ 성인지 예산제도

1) 도입

(1) 호주가 1984년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독일 등 40여 개 나라에서 도입

(2)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10년 예산안부터,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예산안부터 도입

※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과 기금이 작성 대상이고, 세출은 대상이며, 세입은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음(국가재정 운용계획도 대상이 아님)

<해설>

- ① (O) 2010회계연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② (X)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재정이 양성평등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

입니다. 여성성을 지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③ (X) 1984년 호주(독일X)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④ (X) 우리나라 성인제예산제도는 예산과 기금이 작성 대상입니다.

22.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 ㄴ.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
- ㄷ.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답: ④번

<풀이의 핵심>

※ 오츠의 분권화정리: 어떤 (지방)공공재의 중앙공급으로 인한 비용절감 및 지역 간 외부성이 없다면 사회적 후생은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로 파레토 효율적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할 경우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걸쳐 획일적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할 때보다도 (지방정부가 공급할 때) 최소한 같거나 더 높다는 이론

<해설>

- ㄱ. (X) 지방공공재의 중앙공급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 ㄴ. (O)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어야 합니다.
- ㄷ. (O)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로 파레토 효율적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할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23.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
- ② 기관(機關) 간 이용도 가능하다.
- ③ 세출예산의 항(項) 간 전용은 국회의결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 ④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다.

답: ②번

<풀이의 핵심>

※ 이용과 전용

- ① 이용: 입법과목(장·관·항) 간에 상호융통 → 원칙적으로 의결 필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② 전용: 행정과목(세항·목) 간에 상호융통 → 불필요: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필요(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 가능)

<해설>

- ① (X) 이용은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O) 기관 간 이용도 가능합니다.
- ③ (X) 각 항 간의 상호융통은 이용입니다.
- ④ (X) 이용과 전용은 한정성의 원칙(목적 외 사용 금지) 예외입니다.

24.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민의 요구가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사법부가 임명한다.

- ④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답: ②번

<풀이의 핵심>

※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 특징

- ①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된 제도임(우리나라처럼 행정부 소속인 경우도 있음)
- ② 직무상 독립성: 일반적으로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에 해당 → 의회가 임명하지만 직무상 직접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음 → 옴부즈만의 활동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며,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음
- ③ 신청에 의한 조사, 직권조사 모두 가능: 주로 국민의 불평제기에 의해 촉발되지만, 자체정보로 직권조사하는 경우도 있음
- ④ 조사기준: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부당 행위, 소극적 행정, 불합리한 행정, 태만이나 과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
- ⑤ 통제방법: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사권과 시찰권은 인정하나 소추권(기소권,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지 않음(소추권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
- ⑥ 행정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음 → 시정권고를 통한 간접적 통제 → 법적이거나보다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임
- ⑦ 옴부즈만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큼, 엄격한 통제라기보다 조정자·중재자에 가까움
- ⑧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기존의 사법적 구제제도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융통성이 있는 제도임

<해설>

- ① (X)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 ② (O) 옴부즈만의 한계로 가용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활동범위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③ (X)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의회가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④ (X)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시정권고를 통한 간접적 통제의 성격입니다.

25.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은 빅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정형 데이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③ 각종 센서 장비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다.
- ④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답: ①번

<풀이의 핵심>

※ 빅데이터: 대량의 정형(ex 엑셀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ex 동영상) 집합을 의미함

<해설>

- ① (X) 사진과 같은 이미지도 빅데이터에 포함됩니다.
- ② (O) 빅데이터는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③, ④ (O) 빅데이터는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고,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춰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